

분단 70년 북한연구 경향에 관한 고찰

고 유 환*

- I. 머리말
- II. 북한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북한연구의 세대분류
- III. 제1세대와 제2세대의 북한연구: 급기의 대상에서 비교정치이론의 도입
- IV. 제3세대의 북한연구: 내재적 접근과 북한붕괴론 논쟁
- V. 제4세대의 북한연구: 북한사회의 ‘속살’ 보기
- VI. 북한연구동향의 계량분석
- VII. 맺음말: 북한연구의 과제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분단 70년 동안의 북한연구를 주요 시기별 연구동향과 쟁점을 중심으로 개괄해 보고 북한연구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분단 이후 70년 동안의 북한연구를 역사적 전환의 시기와 새로운 방법론의 도입을 기준으로 4세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남북분단에 따른 ‘시대의 아들’로 태어난 북한학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데올로기적 존재 구속성을 벗어나 객관적 학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갖춰 나가고 있다. 북한자료의 개방 확대, 북한이탈주민의 증가, 북한연구에서의 다양한 방법론의 도입 등은 북한연구를 질적·양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토양을 만들어 주었다.

최근의 북한연구는 어떤 특정한 연구방법이나

흐름으로 정리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다원화되었다. 북한연구는 질적으로 심화되고 양적으로 확대됐다. 이제 북한연구는 지배적인 패러다임 없이 다양한 방법론과 분석방법이 도입되어 방법론적으로 특정 이론을 적시하기 어렵게 됐다.

북한학이 객관적 학문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첫째, 이데올로기적 편견과 희망적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 둘째, 방법론에 충실한 북한연구에 천착해야 한다. 셋째, 북한 기초연구와 역사연구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끝으로, 북한연구에서 학제 간 또는 다학문적 접근을 적극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북한학, 북한연구방법론, 북한연구동향, 일상생활연구

I. 머리말

우리 민족은 1945년 8월 15일 일제식민지로부터 해방을 맞았지만 곧바로 분단된 지 어느덧 70년이 되었다. 남북분단 이후 우리는 북한 변수가 삶의 일부를 지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배하는 ‘분단체제’에서 살아가고 있다. 남북한에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두 정권이 들어서 체제경쟁을 지속하면서 상대 체제에 대한 연구도 불가피해졌다.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북한문제와 통일문제도 학문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어느덧 ‘북한학’과 ‘통일학’이란 학문이 생소하지 않게 됐다.¹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구소련 등 사회주의권에서 흘러나온 북한관련 자료, 남북 관계 진전에 따른 북한자료 개방, 북한이탈주민의 대거 입국 등으로 북한 및 통일문제 연구 환경은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대학,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등에 설치된 북한학과에서 북한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연구자의 수가 늘어났고, 연구 분야도 정치, 통일, 외교, 안보 위주에서 경제, 사회, 문화, 일상생활 등으로 확대됐다. 연구방법 면에서도 거의 모든 학문분야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연구방법들을 북한연구에 적용하는 연구자가 늘어났다. 북한학 이외의 개별 학문 분야에서 북한문제를 연구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제 북한연구가 북한 전문가의 전유물이 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냉전시대 북한연구가 ‘금기’의 영역으로 치부되기도 했지만, 이제 북한연구는 어떤 특정한 연구방법이나 흐름으로 정리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다원화되었다. 최근 북한연구는 냉전시대 북한연구방법의 대세였던 전체주의 접근법과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바로알기운동’ 차원에서 도입된 ‘내재적 접근’을 넘어 다양한 인식론과 방법론, 분석기법을 도입하고 있다. 북한연구는 질적으로 심화되고 양적으로 확대됐다. 이제 북한연구는 지배적인 패러다임 없이 다양한 방법론과 분석기법이 도입되어 방법론적으로 특정 이론을 적시하기 어렵게 됐다. 굳이 지난 10여년 동안의 새로운 북한연구 경향을 꼽는다면 일상생활연구방법, 도시사 연구방법, 행위자-네트워크이론(Actor-Network Theory: ANT)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세계적 차원의 냉전이 해체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냉전적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냉전적 분단체제의 유지는 객관적 북한연구를 어렵게 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한다. 접근법은 분석에 임하는 사람이 스스로의 연구방향을 잡고 자료선택을 조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가정의 체계 혹은 조직화된 개념이다. 인식론이 방법론을 결정하기 때문에 인식론적 오류는 방법론적 오류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객관적’ 북한연구를 위해 ‘이데올로기적 편향’과 ‘희망적 사고’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¹ 고유환, “북한연구 방법론의 현황과 과제,” 『통일과 평화』, 창간호 (2009), p. 31.

이 연구는 분단 70년 동안의 북한연구 전체를 조망하기 때문에 특정 시기나 특정 이론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못하는 한계가 있다. 내재적 접근과 관련한 논쟁, 일상사 또는 일상생활연구방법과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의 북한 적용, 도시사연구 방법 등과 관련한 연구는 이미 이뤄진 선행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 시기별 연구동향과 쟁점을 개괄해 보고 북한연구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데 한정하고자 한다.

II. 북한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북한연구의 세대분류

북한학은 북한문제를 다양한 방법론과 이론을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지역학이자 우리 민족문제를 연구하는 한국학의 일부다. 북한학은 한반도 북쪽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큰 틀에서는 한국학의 일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학은 단순히 지역학의 범주로만 보기 어려운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특수성이 내재돼 있다.

‘민족정체성’의 관점에서 볼 경우 북한은 우리와 함께 공동의 생활권을 유지해야 할 우리 민족의 반쪽이다. ‘국가정체성’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고 대결하는 한반도 북단을 불법으로 점유한 적대단체로 규정된다. 이와 같이 북한은 함께 살아야 할 자(自)의 일부이자 경쟁하고 극복해야 할 타(他)라는 인식의 이중성을 가진다. 사회주의권 붕괴와 남북화해의 진전으로 북한을 민족공동번영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민족정체성이 강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천안함-연평도 사태 등으로 인해 대북인식이 나빠지면서 국가정체성이 강화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시대가 도래하면서 북한을 하나의 ‘주권 국가’로 인식하면서 민족감정을 내세우지 말고 국제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강조해야 한다는 ‘글로벌 정체성’의 관점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인식의 다중성은 북한연구방법에도 그대로 반영돼 나타났다. 북한학을 객관적 학문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 대립에서 오는 대북인식의 차이, 대북정책과 관련한 남남갈등, 현장접근의 제한에 따른 자료수집의 어려움 등을 극복해야 한다. 냉전시대 ‘과학적’ 북한연구를 제약했던 결정적인 요인은 분단체제에서 규정되는 연구자의 ‘존재 구속성’이라고 할 것이다. 냉전시대 북한은 연구의 대상이라기보다 타도와 극복의 대상이었다. 상대를 부정하는 데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자폐적 정의관(self-righteous posture)’은 북한을 협력의 대상이 아닌 타도와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흡수통일과 적화통일을 지향하

는 남북 관계의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은 북한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냉전시대 남과 북이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적의 위협으로부터 체제와 정권을 지키기 위해 ‘적대적 의존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연구는 적(‘북괴’)에 대한 연구로 인식돼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주로 이데올로기 비판교육 차원에서 북한 공산주의가 다뤄지다 보니 객관적 북한연구는 이뤄지기 어려웠다.

냉전시대 북한연구는 정책적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제한적 영역에서 이뤄졌다. 냉전시대 북한은 생사를 걸고 대립·갈등하는 타도와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됨에 따라 특별한 연구방법론과 이론의 적용 없이 김일성 체제의 성립과 북한 공산주의 운동사를 서술하는 데 치중했다. 북한연구의 제1세대는 북한에서 월남한 김창순, 김남식, 국내 연구자인 양호민, 재미학자인 서대숙, 이정식 등을 꼽을 수 있다. 방법론적으로는 2세대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서 북한연구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전문가를 양성한 민병천, 김갑철 등도 광의의 제1세대 북한연구자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의 초기 북한연구는 북한체제를 경험한 몇몇 인사들과 주로 정부기관으로부터 북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소수의 ‘관변학자’들이 주도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북한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본격화한 것은 미중 간에 데탕트가 진행된 1970년대 초부터다. 서구에서 비교정치학과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연구자들과 국내에서 주로 정치학을 전공한 북한연구의 제2세대들이 전체주의 접근법과 서구 실증주의 연구방법을 북한연구에 적용하면서부터 북한연구는 학문의 대상으로 취급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북한 원전자료가 일부 개방되고 ‘북한바로알기운동’이 일어나면서 국내파 중심의 북한연구 제3세대가 출현했다. 1980년대 말 ‘내재적 접근’이 소개되면서 방법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당시까지의 북한연구는 주로 정치학 중심으로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운영원리, ‘수령제’, ‘유일체제’ 등 북한체제성격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뤘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상부구조중심의 연구방법이 사회주의권 체제붕괴와 체제전환 등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반성아래 ‘아래로부터의 역사’, ‘미시행태’와 ‘거시구조’의 연결, 인간과 사물 행위자들 사이의 ‘행위자-네트워크’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진 제4세대 북한연구자들이 북한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북한연구의 세대분류는 주요 역사적 시기와 방법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다소 자의적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 국내 북한연구의 제1세대²는 분단 이후 북에서 내려 오거나 국내에서 북한 공산주의를 연구한 학자들로, 북한연구에 특별한 이론이나

방법론 도입 없이 북한 공산주의 운동을 역사적으로 기술하고 북한실상을 소개하거나 비판하는데 치중한 학자들이다. 제2세대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주로 서구에서 국제정치학과 비교정치학을 전공한 학자들³과 국내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학자들⁴로서 서구에서 개발된 이론과 방법론을 북한연구에 본격적으로 적용한 학자들을 꼽을 수 있다. 제3세대 북한연구자들은 1980년대와 1990년대 국내외에서 북한을 연구한 학자들로서 ‘북한바로알기운동’과 내재적 접근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운 북한연구를 시도했던 학자들⁵이다. 북한연구의 제4세대는 1994년 국내에서 북한학과의 창설되는 등 ‘북한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북한학을 전공한 북한연구의 새로운 세대로 2000년대 이후 본격화한 일상생활연구방법, 도시사연구방법, 행위자-네트워크이론 등을 북한연구에 적용하면서 ‘밑으로부터의 북한역사’, 미시사 등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속살을 파헤쳐 보려는 학자들⁶을 꼽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분단 이후 70년 동안의 북한연구를 역사적 전환의 시기와 새로운 방법론의 도입을 기준으로 4세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북한연구의 세대 분류는 연구의 편의를 고려한 다소 자의적인 분류로 1.5세대, 2.5세대, 3.5세대로 분류되거나 세대구분이 애매한 연구자들도 있을 수 있다. 누락되거나 분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연구자들도 다소 있을 것이지만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의 편의를 위해서 세대분류를 해보았다. 잘못된 부분은 추후 수정·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

Ⅲ. 제1세대와 제2세대의 북한연구: 금기의 대상에서 비교정치이론의 도입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한 ‘군사적 편의주의’에 따라 한반도 남북한에 미군정과

² 김창순, 김남식, 양호민 등.

³ 이상우, 김학준, 김덕, 박재규, 안병영, 양성철, 유석렬, 전인영, 장달중 등.

⁴ 민병천, 김갑철, 이상민, 강성운, 정세현, 고성준, 최완규, 전용현, 백인학, 이계희, 김창희, 백영옥, 이상만 등.

⁵ 서동만, 이종석, 백학순, 고유환, 유호열, 전현준, 정규섭, 서재진, 허문영, 김영수, 류길재, 최대석, 박순성, 최진욱, 박종철, 조성렬, 김영운, 최수영, 임강택, 조동호, 김석향, 김연철, 이우영, 김근식, 정성장, 박형중, 김용호, 김병로, 양문수, 이기동, 전미영, 권오운, 진희관 등.

⁶ 홍민, 정영철, 이정철, 조정아, 최봉대, 서보혁, 송정호, 박영자, 이수정, 윤철기, 박희진, 강동완, 정은미, 김종욱, 전영선, 노귀남, 김지형, 조영주, 임재천 등.

소련군정이 들어서고 단일정부 수립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한반도에는 2개의 분단국가가 출현했다. 1948년 8월 15일 출범한 대한민국의 이승만 정부는 반공을 국시(國是)로 내세우고 ‘북진통일’을 외쳤다. 이승만 정권은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고 미국으로부터 많은 군사·경제 원조를 얻어내기 위해 북진통일을 내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에 맞서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성 정권은 선제적으로 ‘민주기지노선에 입각한 남조선해방전쟁’을 일으켜 분단을 고착화시켰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유엔군과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국제전인 ‘한국전쟁’으로 비화하고 현재까지 정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외세에 의해서 분단됐지만 내전과 국제전을 치루고 전쟁을 끝내지 못함으로써 대립갈등의 소모적인 분단체제를 탄생시켰다. 분단체제는 사상의 자유를 제약하고 상대를 부정하는 데서 자기정체성을 찾는 ‘자폐적인 정의관’을 만들어냈다. 이승만 정권 시기 진보당사건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조봉암의 ‘평화통일론’은 적과의 내통으로 인식될 정도로 북한은 화해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흡수통일의 대상이자 ‘금기(禁忌)’의 대상이었다.

1960년 이승만 정부가 ‘4·19 혁명’으로 무너지고 장면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통일논의의 백화제방(百花齊放)시대라고 할 정도로 북한과의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곧바로 1961년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선건설 후통일’을 표방하고 북한과 대화나 교류협력 없이 본격적인 체제경쟁에 돌입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건설에서 성과를 거두면서 체제경쟁의 자신감을 반영하여 1969년 국토통일원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북한 및 통일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같은 시기 대학에도 북한 및 통일관련 연구소들이 설치돼 북한연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⁷ 국토통일원 설치를 전후해서 북한관련 연구기관들이 대학과 언론사 부속 연구기관에 속속 설치됐지만 주로 공산주의 운동사, 북한 공산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 비판, 그밖에 정책적 필요에 의한 연구과제들이 외국재단의 지원이나 관 주도로 이뤄졌다. 냉전시대 북한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최초의 연구기관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아연)이다. 아연은 1969년부터

⁷ 대학연구소 중에서 북한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한 연구소는 1957년에 미국의 포드재단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북한연구를 진행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아연)를 우선 꼽을 수 있다. 아연이 발간한 연구물들은 우리나라 북한연구의 효시로 볼 수 있다. 그밖에 동아일보 부설 통일문제연구소(1968년), 영남대 통일문제연구소(1969), 동국대 안보연구소(1971, 2000년 북한학연구소로 개편), 북한연구소(1971),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1972) 등이 북한연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김영수, “북한연구 동향 평가: 성과와 과제,” 『동아연구』, 제50집 (2006), pp. 29~31.

1970년대 중반까지 『북한연구자료집』(김준엽·김창순 등 공편), 『한국공산주의운동사』(김준엽·김창순),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양호민), 『북한통치기구론』(박동운), 『북한 조선로동당의 형성과 발전』(방인후), 『북한의 경제정책과 생산관리』(서남원), 『북한정치체제연구』(양호민, 한배호, 김남식 등) 등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북한관련 연구를 학문적 수준에서 체계화하기 시작했다.⁸

미중 간의 데탕트, 1972년 7·4 공동성명, 1973년 6·23 선언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북한 및 공산권연구가 급증했다. 중앙정보부가 주관하여 만든 ‘자유아카데미’는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박사급 연구자들을 모아 북한 및 공산권에 관한 교육과 함께 연구를 지원하여 전문가로 양성했다. 자유아카데미는 1978년 1기생 20명, 1979년 2기생 27명을 배출하고 문을 닫았다.⁹ 정부로부터 ‘불온시’ 됐던 공산주의 이론과 관련한 연구물과 북한 원전자료를 제공받고, 각 학문분야별 우수한 교수로부터 집중교육을 받은 자유아카데미 출신 연구자들은 대학 교수와 국가기관의 전문가로 자리잡고 북한 및 공산권연구를 진행했다. 1980년대 대학에는 국민윤리학과가 대거 개설되고 자유아카데미를 수료한 연구자들의 상당수가 교수로 채용돼 북한 공산주의와 김일성 체제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을 담당했다. 대학에 공산권 및 북한관련 연구소가 설립되면서 공산권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 및 대학부설연구소들이 1979년 6월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라는 단체를 창설했다.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는 설립 이후 10년 동안 800여 편의 논문과 8권의 단행본을 발간하는 등 북한연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¹⁰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데탕트 흐름이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1972년 남과 북이 7·4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등 남북 관계에도 화해 조짐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박정희 정권은 미중의 화해가 미국의 대한반도 안보공약의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단하고 로시터(Clinton L. Rossiter)의 ‘위기정부(crisis government)’ 개념을 도입하여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비상 조치를 취했다. 1972년 10월 남측의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을 채택하고, 12월

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년지』(1977), pp. 86~87.

⁹ 김영수, “북한연구 동향 평가: 성과와 과제,” p. 30.

¹⁰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가 발간한 자료집에 의하면, 1945년부터 1986년까지 발간된 북한관련 단행본과 연구논문들은 2,898건이다. 이 중 정치분야 555건, 외교분야 461건, 경제분야 371건, 법률분야 90건, 역사분야 99건 등으로 나타났다. 1945년부터 1986년까지 한국에서의 북한연구동향은 신정현, “북한연구 현황,”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 『한국공산권연구백서』(1989), pp. 59~69 참조.

북측이 ‘주석제헌법’을 채택함으로써 남의 유신체제와 북의 유일체제 사이에 이른바 ‘적대적 의존관계’가 형성됐다. 남북한의 정치권력들이 상대의 위협으로부터 정권과 체제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내부권력을 강화하는 적대적 의존관계를 형성하고 장기 집권체제로 접어들어서 체제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따라서 당시의 북한연구는 체제경쟁의 대상, 타도와 극복의 대상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는데 주력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국토통일원이 지원한 북한연구의 상당부분은 남북한 사이의 정통성 경쟁과 관련한 것이었고, 주석제 헌법과 북한 권력구조 등 정치체제와 관련한 연구물들이 다수를 이뤘다.

김영수의 지적처럼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연구는 ‘금기’에서 ‘공개’의 장으로 나오게 됐다. 그러나 연구의 대부분이 북한을 ‘알고 이기는 길’을 모색한다는 취지 아래 정부주도로 이뤄짐으로써 ‘선협적’인 결론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¹¹ 당시 북한연구의 상당부분은 북한 공산주의 체제의 ‘악마화’를 위한 것으로, 전체주의 접근법을 활용하여 북한 김일성 체제가 전체주의 독재체제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냉전시대 북한연구는 주체사상, 지도자, 당, 헌법 등에 기초해서 위로부터 이뤄지는 통치과정을 정태적(static)으로 분석했다. 대표적인 접근방법은 전체주의 접근법으로 주로 북한을 비판하는 데 치중했다. 체제경쟁이 치열했던 냉전시대, 김일성 체제의 약점을 지적하는 전체주의 접근법이 북한 유일체제의 속성을 정태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었지만, 엘리트 층원과정이거나 이익집단의 갈등 등 정치과정의 동태성(dynamics)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당시 전체주의 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구의 행태주의에 입각한 구조기능이론을 북한연구에 적용하려는 연구시도도 나타났다. 1960년대 말부터 일부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에서 소련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분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미중 간 데탕트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사회주의체제 내에서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서구 학자들 사이에서는 비교정치학과 비교공산주의 이론을 사회주의·공산주의 연구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서구에서 비교정치학이나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행태주의에 기초한 구조기능이론 등을 북한연구에 적용하여 정치과정의 동태적 측면을 파악하려고 하였다.¹²

¹¹ 김영수, “북한연구 동향 평가: 성과와 과제,” p. 31.

¹² 안병영, “북한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정경연구』, 8월호 (1975); “통일 및 북한연구의 방법론 평가,” 『통일정책』, 제3권 1호 (1977); 안병영, 『현대공산주의연구』 (서울: 한길사, 1989).

1979년 10월 박정희 정권이 막을 내리고 1980년 10월 북한 조선로동당 6차 당대회가 열리는 것을 계기로 북한연구에 대한 지평이 넓어지기 시작했다. 서구에서 비교정치학과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연구자들이 들어와서 북한연구의 ‘제2세대’를 형성하고 비교정치이론과 국제관계이론 및 비교공산주의(비교사회주의)이론을 북한연구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북한의 조선로동당 6차 당대회를 둘러싼 권력엘리트의 충원에 관한 문제를 엘리트접근법을 적용하여 연구하는 등 비교정치이론을 북한연구에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IV. 제3세대의 북한연구: 내재적 접근과 북한붕괴론 논쟁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한 소련 및 동구권의 개혁·개방과 한국에서의 민주화 진전은 북한연구에 새 바람을 몰고 왔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노태우 정부가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 선언)’을 통해서 북한을 타도의 대상에서 화해협력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면서 ‘북한바로알기운동’이 탄력을 받게 됐다. 1980년대 중·후반 대학가 운동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한 북한바로알기운동, 사회주의권 개혁·개방,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등은 북한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밑거름이 됐다.

1980년대 말의 북한연구에서 주목할 사실은 북한이 조선로동당창건 40돌을 맞아 발간한 ‘주체사상 총서(전10권)’ 등 북한 원전자료들의 개방이 ‘묵인’되고 재독학자 송두율에 의해서 ‘내재적 접근’이 소개됐다는 점이다. 지금도 북한 원전자료가 ‘특수자료’로 취급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당시 북한자료의 일시 개방은 획기적인 것이었다. 북한바로알기운동이 일어나면서 반공교육과 관련자료를 통해서 ‘선협적’으로 재단돼 ‘악마화 된 북한’과, 북한 원전자료를 통해서 ‘내재적’으로 들여다본 ‘있는 그대로의 북한’이 많이 다르다는 점에 충격을 받은 운동권 학생들의 ‘친북’ 움직임도 나타나기도 했다. 송두율에 의한 북한연구에서의 내재적 접근방법의 소개¹³는 당시 젊은 세대들의 북한인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민주화의 진전, 노태우 정부의 7·7 선언과 북한자료의 개방, 북한바로알기운동, 그리고 내재적 접근의 소개는 북한연구의 ‘제3세대’가 나올 수 있는 토양이 됐다.

¹³ 송두율,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와 사상』, 1988년 12월호, pp. 105~109; 송두율, “북한: 내재적 접근법을 통한 전망,” 『역사비평』, 통권 54호 (2001년 봄호). 송두율이 밝힌 북한연구에 있어 ‘내재적 방법’의 구체적 내용은 송두율, 『역사는 끝났는가』 (서울: 당대, 1995)의 “제4부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pp. 205~262 참조.

1989년부터 1991년 사이의 사회주의권 붕괴를 경험하면서 북한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됐다.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 1991년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해체를 목격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북한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991년 4월 ‘민족통일연구원(지금의 통일연구원)’이 개원하면서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북한연구가 본격화됐다고 할 수 있다. 민족통일연구원의 개원을 계기로 북한연구가 타 학문분야로 급속히 확산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50여명에 달하는 각 학문분야별 박사급 전문가들이 북한연구를 본격화하면서 정치분야 위주의 북한연구가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전 학문분야로 확산됐다고 할 수 있다. 북한학을 전공한 전문가도 있었지만 북한문제를 다루지 않았던 다수의 전문가들이 통일연구원에 들어와 북한문제를 연구함으로써 북한연구의 저변확대와 학제간 연구를 촉진하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들 중 상당수는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북한학과 설치나 관련과목을 개설하는 등 북한연구와 교육에도 기여하고 있다. 1994년 동국대에 북한학과가 설립되면서 북한연구가 ‘북한학’의 차원에서 대학에서 정규학문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¹⁴ 그리고 1996년 12월 북한연구자들을 총망라하는 북한연구학회가 만들어질 정도로 북한연구의 저변도 확대됐다.¹⁵

이데올로기적 제약없이 북한연구가 본격화한 시기는 1990년대 초부터일 것이다.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사회주의와의 체제대결은 끝났다’는 인식이 반영돼 북한연구도 이데올로기적 제약과 자료 부족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을 것이다. 소련붕괴 이후 개방된 북한관련 자료의 공개는 북한정권의 수립과 김일성 유일체제 형성과 관련한 연구를 촉진했다. 1990년대 초 본격화한 북한연구 제3세대의 내재적 접근을 둘러싼 북한연구방법론 논쟁¹⁶은 방법론에 충실한 북한연구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에서 개혁·개방을 본격화할 무렵인 1980년대 말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법이 한국에 소개되면서 기존 연구와는 확연히 다른 인식론과 방법론이 북한연구에 적

¹⁴ 1994년 우리나라 최초로 동국대학교에 북한학과가 창설된 이래 명지대, 고려대 서창(세종)캠퍼스, 관동대, 선문대, 조선대 등에 북한학과가 개설됐다. 최근에는 동국대, 고려대 두 대학에만 북한학과가 남아있다.

¹⁵ 2000년대 이전의 북한연구경향에 대해서는 북한연구학회 엮음, 『분단반세기 북한 연구사』(서울: 한울아카데미, 1999) 참조.

¹⁶ 내재적 접근법의 장점을 지적하는 한편 그 결함과 한계를 비판한 논문은 주로 강정인에 의해서 제기됐다. 강정인, “북한연구방법론: 내재적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동아연구』, 제26집(1993); 강정인, “북한연구방법에 대한 새로운 제언,” 『역사비평』, 제26집(1994), pp. 318~342; 강정인, “북한연구방법론: 재론,” 『현대북한연구』, 창간호(1998), pp. 7~42. 내재적 접근에 관한 논쟁은 주로 송두율, 이종석, 김연철과 강정인 사이에 이뤄졌다.

용되기 시작했다. 내재적 접근방법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내적 작동논리에 대한 이해와 함께 비교 사회주의 방법론을 북한연구에 적용할 것을 강조했다. 내재적 접근방법에 대한 ‘친북’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내재적 접근방법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내적 작동논리를 파악하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내재적 접근의 정확한 의미와 방법론적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치열하게 벌어졌던 방법론 논쟁¹⁷은 결국 내재적 접근이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인식론에 가까운 연구 자세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싱겁게 끝났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본격화한 또 하나의 논쟁은 ‘북한붕괴론’과 관련한 논쟁이었다.¹⁸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되면서 북한의 붕괴도 멀지 않았다는 가설이 나오고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다수를 이뤘다. 특히 1994년 7월 8일 반세기동안 북한을 지배해 왔던 절대적 카리스마를 가졌던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면서 비교정치학과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유학과 제2세대 북한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북한붕괴론이 급속히 부각됐다. 김영삼 정부 당시 북한을 ‘고장난 비행기’에 비유하면서 정부차원에서도 북한붕괴론이 득세하면서 각 부처별 급변사태 비상대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진다. 통일연구원에서도 북한의 분야별 위기지수를 계량화하면서 단기적으로 정권유지, 중장기적으로 정권교체 및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를 예측한 바 있다.¹⁹ 당시 필자는 식량난 등 경제위기가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적이 존재하고 지도부가 운명공동체 의식을 가지며 주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지 않아 ‘근근이 버텨낼 것(muddling through)’으로 예측한 바 있다.²⁰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2008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뇌졸중을 계기로 급변사태론과 북한붕괴론이 다시 부각한 바 있다.²¹ 북한붕괴론이 나왔던 두 사례 모두 북한 지도자 변수가 다른 변수를 압도하면서 지도자의 유고를 정권과 체제 붕괴로 연결지우는 ‘희망적 사고’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붕괴론에서 보았던 것처럼 북한연구에서 가끔 목격할 수 있는 문제점은 ‘과학적’ 분석과 ‘규범적’ 주

¹⁷ 이국영, “독일 내재적 접근의 한국적 수용과 오해: 북한연구에 대한 함의,” 『통일문제연구』, 제20권 2호 (2008).

¹⁸ 이현경, “북한연구 현황과 접근방향,” 『평화학연구』, 제11권 4호 (2010), pp. 88~91.

¹⁹ 김성철 외,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996).

²⁰ 고우환,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김정일정권의 진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2호 (1996), pp. 225~245.

²¹ 북한 체제변화와 관련한 기존 논의에 대해서는 류경아·김용호, “북한 체제변화 연구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의 모색,”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1호 (2012), pp. 399~431 참조.

장이 혼재돼 나타난다는 것이다.²² 북한정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대북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북한붕괴가 임박했다고 판단한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제재와 압력에 주력하면서 ‘기다리는 전략’으로 일관했다. 북한이 붕괴되면 핵문제를 비롯해서 산적한 북한문제가 일거에 해결된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북한붕괴론에서 보듯이 북한연구에서 경계해야 할 연구자의 자세는 ‘희망적 사고’를 연구에 반영하는 것이다.

V. 제4세대의 북한연구: 북한사회의 ‘속살’ 보기

다수의 연구자들이 예측한대로 북한이 붕괴되지는 않았지만 김일성 주석 사후 1995년부터 1998년까지 ‘고난의 행군시대’를 거치면서 수십만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이 발생하고 이들 중 일부가 대한민국으로 들어오으로써 북한연구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탈북자들의 집중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사회의 ‘속살’을 들여다보고, 보여주는 공식사회와는 다른 ‘또 하나의 북한 사회(제2사회)’²³가 있다는 점을 밝혀냄으로써 북한사회가 지탱해온 동력이 ‘시장화’ 등에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첫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북한붕괴론과 급변사태론은 사라지고 북한은 타도의 대상이 아닌 ‘포용’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경로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다. 탈북자들의 증언과 직접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의 실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북한연구가 이전보다 훨씬 풍부해졌다. 그러나 타도의 대상을 포용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서 북한인식을 둘러싼 남남갈등이 벌어졌다. 남남갈등의 근저에는 ‘북한 변화론과 불변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속적인 대북 포용정책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정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측과 남북정상회담 등 당국 간 회담과 교류협력으로 남북 간 신뢰가 쌓이고 북한도 점차 변하고 있다는 측 사이의 북한 변화논쟁이 벌어졌다.

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은 이념갈등, 지역갈등 등과 결합돼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세력은 ‘친북좌파 정권의 잃어버린 10년’이란 정치구호를 들고 나오는 등 김대중-노무현 정

²² 이상근, “북한붕괴론의 어제와 오늘: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북한붕괴론에 대한 평가,” 『통일연구』, 제12집 제2호 (2008), p. 112.

²³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서울: 나남출판, 1995).

부의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정치적 심판을 요구했다. 결국 햇볕정책을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관계 재설정을 요구하고,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핵실험과 천안함-연평도 사태 등 대남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남북관계는 단절됐다. 남북관계의 단절은 북한연구에도 위축을 가져왔다. 교류협력의 중단에 따른 북한전공자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북한학과도 동국대와 고려대 2개 대학에만 남아있고 여타 대학은 북한학 전공을 폐지(명지대, 관동대)하거나 동북아학과·글로벌한국학과(선문대) 등으로 통합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북한연구 분위기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연구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은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모든 학문분야에서 북한문제를 다루고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사용하는 이론과 분석방법을 북한연구에 적용함으로써 북한학의 '고유성'을 말하기 어려운 단계로 진입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2014년 10월에 서울에서 열린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북한연구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저변이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북한학 관련 박사학위 수여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데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북한관련 연구자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여러 학문분야에서 다양한 방법론을 도입하여 북한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연구의 질적 수준은 높은 편이 아니다. 최근의 북한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는 일상생활연구방법,²⁴ 행위자-네트워크이론,²⁵ 도시(사)연구방법,²⁶ 문화인류학²⁷ 등을 북한연구에 적용한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²⁴ 박순성·홍민 역음, 『외침과 속삭임: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서울: 한올아카데미, 2010); 홍민·박순성 역음, 『북한의 권력과 일상생활: 지배와 저항 사이에서』 (파주: 한올아카데미, 2013).

²⁵ 행위자-네트워크이론에 관한 초보적 이해는 브루노 라투르 외 지음, 홍성욱 역음, 『인간·사물·동맹: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서울: 이음, 2010) 참조.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의 북한연구에서의 적용에 대해서는 홍민, "행위자-네트워크이론과 북한연구: 방법론적 성찰과 가능성," 『현대북한연구』, 제16권 1호 (2013), pp. 106~170; 박춘대, "북한 '핵무력'의 동학과 네트워크,"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등을 참조.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을 한반도 분단체제와 관련한 문제에 적용한 연구는 홍민, "분단의 사회-기술적 네트워크와 수행적 분단,"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1호 (2013), pp. 283~316; 박순성, "천안함 사건의 행위자-네트워크와 분단체제의 불안정성,"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1호 (2013), pp. 317~354; 이희영, "(탈)분단과 국제이주의 행위자 네트워크: '여행하는' 탈북 난민들의 삶과 인권에 대한 사례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1호 (2013), pp. 355~393; 고유환,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위협인식과 대응에 관한 행위자-네트워크,"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2호 (2013), pp. 57~85 등을 참조.

²⁶ 고유환·홍민 외, 『사회주의 도시와 북한: 도시사연구방법』 (서울: 한올아카데미, 2013); 고유환·박희진 외, 『함흥과 평성: 공간·일상·정치의 도시사』 (서울: 한올아카데미, 2014); 최봉대, "북한의 도시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16권 1호 (2013), pp. 70~105; 조정아, "구술자료를 활용한 북한도시 연구: 이론적 자원과 방법," 조영주 편, 『북한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관점·방법론·연구방법』 (서울: 한올아카데미, 2015), pp. 170~197.

²⁷ 권헌익·정병호, 『극강국가 북한: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 (파주: 창비, 2013).

그동안의 북한연구가 주체사상, 당-국가체제, 유일체제의 형성과 후계구축 등 주로 상부구조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주목했다면, 일상생활연구²⁸는 주민의 일상을 통해서 북한사회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사회과학계에서 일상사 또는 일상생활연구가 본격화 된 것은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진행된 사회주의권 붕괴가 계기가 됐다.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는 사회과학자들과 역사가들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어느 누구도 사회주의권 붕괴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 동독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는 광경을 지켜보던 역사가들이 정신을 차리고 확인한 것은 역사를 만든 사람들이 민중이라는 것이다. 민중의 잠재 에너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역사’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일상사연구를 수행하면서 독재국가가 은폐한 현실사회주의의 속살이 보이기 시작했다.²⁹

역사학과 사회학에서 사용하던 일상사 또는 일상생활연구방법이 북한 사회주의체제연구의 한 방법으로 주목받게 된 것은 상부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기존의 전체주의 접근법과 구조기능이론 등이 사회주의권 체제전환 등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일상생활연구는 미시세계와 거시구조, 과거와 현재를 ‘짜 집어(patchwork)’ 북한사회의 속살을 파악하려는 노력이다. 주로 역사학이나 사회학 연구에서 사용하던 일상사·일상생활연구방법이 북한연구에 도입됨으로써 밑에서 이뤄지는 주민들의 일상이 상부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미시사적인 일상생활연구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극도로 폐쇄체제를 유지해 왔던 북한에 대한 일상생활연구가 가능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한 탈북자들 때문일 것이다. 탈북자들에 대한 면접조사가 가능해 짐으로써 북한의 일상생활연구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³⁰

최근 북한연구에서 새롭게 부각하고 있는 또 하나의 연구동향은 행위자-네트워크이론(ANT)³¹의 적용이다.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은 1980년대 초반에 과학기술학을 연구하던 프랑스의 브루노 라투르, 미셸 칼롱, 그리고 영국의 존 로 등에 의해서 정립되었다.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은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 형성되는 네트워크

²⁸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게오르크 짐멜(Georg Simmel),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 등으로 대표되는 일상생활연구자들은 “일상의 현대성을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의 짜집기(패치워크) 같은 것으로 보기 시작했다. Ben Highmore, *Everyday Life and Cultural Theory: An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2002), pp. 174~175.

²⁹ 김기봉, “북한에 대한 일상사연구의 가능성과 의미,” 박순성·홍민 엮음, 『외침과 속삭임: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0), pp. 119~120.

³⁰ 고유환, “북한연구에 있어 일상생활연구방법의 가능성과 과제,” 『북한학연구』, 제7권 1호 (2011).

³¹ 홍민, “행위자-네트워크이론과 북한연구: 방법론적 성찰과 가능성,” 『현대북한연구』, 제16권 1호 (2013), pp. 106~170.

크에 주목한다.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은 기계 같은 비인간(사물)들이 인간처럼 행위능력(agency)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인간과 비인간을 동등하게, 대칭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분단체제를 둘러싼 역동적인 상호작용과 구조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비인간(사물), 국가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행위자-네트워크를 살펴봐야 한다. 특히 한반도 정세를 지배하는 북핵문제는 한반도 문제를 이해하는 ‘의무통과지점’이다. 새로운 핵물질을 사용한 핵실험일 가능성이 높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남북한 각각의 국내 정치와 분단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동북아시아 관련 국가들의 대외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연구에서도 분단체제를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네트워크를 분석하려는 연구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VI. 북한연구동향의 계량분석

1. 북한관련 박사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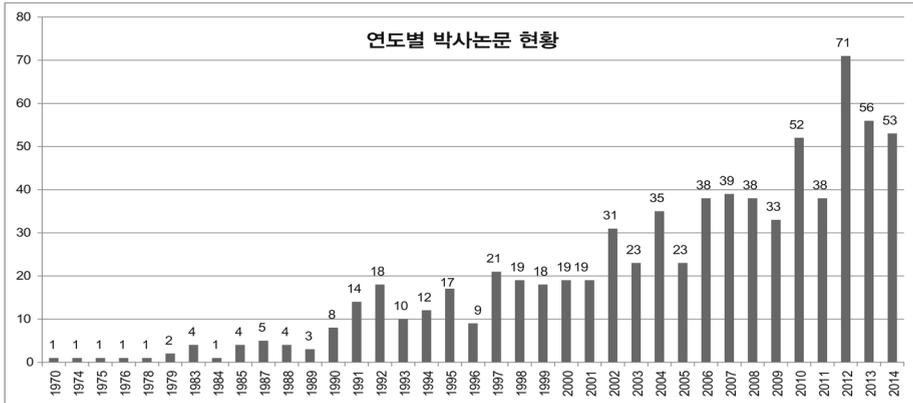
북한문제를 박사학위 논문 주제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1970년부터다.³² 국회에 등록된 1970년부터 2014년까지의 북한관련 박사학위 논문은 742편이다. 시기별로는 1970년 첫 박사논문을 시작으로 1970~1979년 7편, 1980~1989년 21편, 1990~1999년 146편, 2000~2009년 298편, 2010~2014년 270편의 박사학위논문이 제출되었다.³³

2000년대에 들어서면 남북화해가 진전됨에 따라 북한관련 박사학위논문도 급증했다. 일반대학원에 북한학 박사과정이 개설되고 북한전문대학원대학교가 개교하면서 북한관련 박사학위논문의 편수도 급증하고 있다.

³² 석사학위 연구동향까지 포함한 연구로는 Yongsoon Kim, Eunkook Lee, and Haekyung Song, “A Sketch of North Korean Studies in South Korea: The Current Status and the Prescriptions to Establish Its Identity as an Independent Discipline,”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45, No. 3 (2011) 참조.

³³ 안득기·허정필, “북한연구동향에 관한 소고: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1970~2012년),” 『평화학연구』, 제14권 5호 (2013), pp. 143~161. 이 글에서는 2013년과 2014년의 박사학위를 추가하여 집계한 것이다. 박사학위 논문집계와 분석과정에서 동국대 대학원 박사과정 허정필의 도움이 있었음을 밝혀둔다.

<그림 1> 연도별 북한관련 박사학위 논문동향



742편의 박사학위논문을 주제어³⁴를 중심으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주요 분야별 박사학위 연구동향

분류	편수	분류	편수		
1	경제	98	15	인권	10
2	정치	70		여성	10
3	대외	62	18	행정	9
4	탈북자	61		체육	9
5	군사	55	20	급변사태	8
6	체제	49	21	역사	7
7	사회문화	44		과학기술	7
8	법	38	23	토지	6
9	북핵	33		안보	6
10	교육	31		협상	6
11	통일	29	26	의료	5
12	사상	28	27	농업	4
13	문학	26		사회복지	4
14	종교	12	29	NGO	3
			30	언론	2
15	환경	10	계		742

³⁴ NGO, 경제, 과학기술, 교육, 군사, 급변사태, 농업, 대외관계, 문학, 법, 핵, 사상, 사회문화, 사회복지, 안보, 언론, 여성, 역사, 의료, 인권, 정치, 종교, 체육, 체제, 탈북자, 토지, 통일, 행정, 협상, 환경 등.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배출한 북한관련 박사학위논문은 30여 개 이상의 주제영역에서 742편의 박사학위논문이 나왔다. 이중에서 북한경제 관련 연구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정치, 외교 순으로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경제, 정치, 대외관계 다음으로 탈북자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는 점이다. 반면에 의료, 농업, 사회복지, 언론, NGO 지원에 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³⁵

2. 전문 학술지에 나타난 북한연구동향³⁶

북한관련 전문 학술지에 나타난 최근 북한연구동향과 관련해서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북한, 통일과 관련 10개의 학술지에 게재된 북한관련 논문들을 계량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대상 학술지들은 한국정치학회보(한국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한국국제정치학회), 북한연구학회보(북한연구학회), 북한학보(북한연구소), 통일문제연구(평화문제연구소), 통일정책연구(통일연구원), 현대북한연구(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북한학연구(동국대 북한학연구소), 통일연구(연세대 북한연구원), 통일과 평화(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등 학회보와 북한·통일 관련 전문학술지이다.³⁷

지난 13년간 10개 학술지에 1594편의 북한관련 논문이 게재됐다. 10개 학술지에 매년 120여 편의 북한관련 논문이 발표됐다는 것은 지난 10여 년간 북한연구가 양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논문까지 포함하면 연간 150여 편 내외의 논문이 발표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³⁵ 안득기·허정필, “북한연구동향에 관한 소고: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1970~2012년),” p. 156.

³⁶ 전문 학술지에 나타난 북한연구동향은 고유환, “북한연구동향,”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60년사(증보분) 2003~2013』(서울: 한국정치학회, 2013), pp. 268~282를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학술지에 나타난 북한연구동향은 동국대 대학원 박사과정 김수영 조교의 도움을 받아 정리한 것이다.

³⁷ 10개 학술지는 연구학회, 대학부설 연구소, 연구기관 등에서 연간 2회에서 6회 발간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5개(한국정치학회보, 국제정치논총, 북한연구학회보, 통일정책연구, 통일문제연구) 등재후보지 5개(현대북한연구, 북한학연구, 통일연구, 북한학보, 통일과 평화) 등이다.

<표 2> 북한전문 학술지 논문게재 편수(2002~2014)

순위	학술지(발행기관)	논문 게재 수
1	북한연구학회보(북한연구학회)	306
2	통일정책연구(통일연구원)	265
3	통일문제연구(평화문제연구소)	256
4	현대북한연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83
5	북한학연구(동국대 북한학연구소)	147
6	통일연구(연세대 북한연구원)	133
7	북한학보(북한연구소)	128
8	통일과 평화(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77
9	국제정치논총(한국국제정치학회)	52
10	한국정치학회보(한국정치학회)	47

<표 3> 북한전문 학술지 주제별 논문편수(2002~2014)

	정치	경제	사회·문화	통일	외교	기타	합계
논문편수	315	225	401	191	307	155	1,594
백분율	19.7%	14.1%	25.1%	11.9%	19.2%	9.7%	100%
순위	2	4	1	5	3	6	

10개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정치/경제/사회·문화/통일/외교/기타 등 6개의 주제로 분류해 보았다.³⁸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지난 13년간 북한관련연구에서 정치, 외교, 통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50.8%로 여전히 과반 이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와 사회·문화의 비중도 이전시대와 비교하면 월등하게 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³⁹ 특히 사회·문화에 대한 비중이 경제보다 많다는 것은

³⁸ 논문 제목을 중심으로 분류한 분야별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정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 사상, 군사, 선군정치, 통치담론 등. 경제: 경제협력, 화폐개혁, 산업, 시장화, 공업, 농업, 개혁개방 등. 사회·문화: 영화, 미술, 소설 등 문화예술 분야 연구, 탈북자(남한 정착, 인터뷰, 학습)연구, 교육, 언어, 인권, 법 등. 통일: 통일사례, 통일방안, 남북정상회담, 남북공동성명, 통일비용, 평화체제, 통일담론 등. 외교: 북미, 북중, 북러, 북일, 국제사회, 6자회담, 베트남 등. 기타: 연구방법론, 비교연구, 학문체계 분류 등이다.

³⁹ 1945년 8월 15일 분단 이후 북한관련 단행본, 논문, 자료집은 수없이 많다. 이상우의 연구에 의하면 1980년 6월 30일까지 국토통일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북한관계연구자료집'에 수록된 저작들만 집계해도 5,722건에 이른다. 논문이 4,853건, 단행본 720건 자료집 149건이다. 분야별로는

북한에 대한 관심이 정치와 경제로부터 사회·문화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남북화해의 진전에 따른 북한사회의 개방 확대, 북한주민들에 대한 접촉 확대, 북한이탈주민 수의 증가, 북한자료 개방 등에 따른 북한 사회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환경의 변화는 북한주민생활에 대한 일상사 또는 일상생활연구가 늘어나는 배경이 되었다.

3. 북한관련 단행본 및 총서 동향

북한관련 단행본의 수는 집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김영수의 집계에 의하면 1950년부터 2005년까지 2,243권이다.⁴⁰ 이후 나온 책까지 집계하면 <표 4>와 같이 3910여 권이 넘는 북한관련 책이 발간됐다. 2000년대 이후 남북화해가 진전되면서 북한관련 단행본이 붓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단행본들이 다룬 주제들은 북한의 분야별 이해와 관련한 개론서, 방법론,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 등과 관련한 연구물들이다.⁴¹

<표 4> 단행본 출간 현황(1940~2014)

	출간연도	발행권수			출간연도	발행권수	
1940년대	1945~1949	0	0	1950년대	1950~1959	6	6
1960년대	1960~1964	6	23	1970년대	1970~1974	44	171
	1965~1969	17			1974~1979	127	
1980년대	1980	13	309	1990년대	1990	103	1,041
	1981	13			1991	93	
	1982	21			1992	74	
	1983	13			1993	83	
	1984	19			1994	129	
	1985	15			1995	134	

정치외교영역 1,272건으로 가장 많고, 통일관계 1,116건, 군사관계 997건, 사회문화영역이 892건, 경제·과학영역은 269건에 불과했다. 이상우, “북한연구,” 『공산권연구현황』 (서울: 법문사, 1981), pp. 79~100.

⁴⁰ 김영수, “북한연구 동향 평가: 성과와 과제,” p. 45.

⁴¹ 단행본과 관련한 자료는 손호철, “한국정치 연구 50년,” 『한국정치학회50년사, 1953~2003』 (서울: 한국정치학회, 2003), pp. 198~222; 고우환(2013), “북한연구동향,” 『한국정치학회60년사 (증보분) 2003~2013』, pp. 273~281 참조.

	1986	16			1996	117
	1987	26			1997	108
	1988	66			1998	100
	1989	107			1999	100
2000년대	2000	123	2,360	1940~2000년대 총발행권수	연대별 연간 평균 발행권수	
	2001	126			1940년대	0
	2002	138			1950년대	6
	2003	134			1960년대	11.5
	2004	112			1970년대	85.5
	2005	59			1980년대	30.9
	2006	191			1990년대	104.1
	2007	169			2000년대	157.3
	2008	201				
	2009	155				
	2010	166				
	2011	214				
	2012	239				
	2013	201				
2014	132					

출처: 1945~2005년까지 통계는 김영수, “북한연구 동향평가: 성과와 과제,” 『동아연구』, 제50집 (2006), p. 45를 참고하였고, 2006~2014년 통계는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 사이트 소장자료에서 ‘북한’ 키워드에 해당되는 도서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4,000여 권에 이르는 단행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글에서는 단행본은 편수만 확인하고 북한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룬 총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관련 총서의 효시는 앞에서 소개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가 1969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발간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정치』, 『북한통치기구론』, 『북한 조선로동당의 형성과 발전』, 『북한의 경제정책과 생산관리』, 『북한정치체계연구』 등을 우선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중앙정보부의 지원을 받아 1971년에 설립된 것으로 알려진 사단법인 북한연구소가 1977년부터 발간한 『북한정치론』, 『북한경제론』, 『북한사회론』, 『북한문화론』 등 북한연구총서를 들 수 있다.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아 당시 ‘북괴’로 지칭했던 북한의 실상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개론서를 낸 것은 북한연구소가 처음일

것이다.

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이 본격화할 무렵인 1990년 또 하나의 북한연구총서가 발간됐다.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가 기획하고 문교부, 국토통일원, 한국방송광고공사 등이 지원하여 이뤄진 북한 개론, 북한의 정치·경제·사회, 북한의 언론, 북한의 말과 글, 북한의 문화·예술·교육 등 ‘북한의 인식’ 시리즈 전12권(을유문화사)은 북한연구의 지평을 사회·문화분야로 확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연구학회가 북한전문 연구자들의 분야별 대표 논문을 엮어 2006년에 발간한 ‘북한학총서’ 전10권(경인문화사)은 기존 총서에서 다룬 북한의 정치·경제·군사·사회를 비롯해서 연구영역을 북한의 과학기술, 여성과 가족으로 확대했다. 북한연구학회는 2014~2015년에 걸쳐 김정은 시대에 초점을 맞춰 김정은 시대 정치와 외교, 경제와 사회, 문화, 예술, 과학 그리고 북한연구의 새로운 방법론 및 통일문제의 쟁점 등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연구총서’ 전5권(한울아카데미)을 발행했다.

1970년대 말에 나온 북한연구총서는 당시 북한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더라도 학계의 최고권위의 전문가들을 모아 집필했다. 1990년대 초까지 나온 북한연구총서는 주제 분야별 연구체계를 잡아 관련 전문가들이 교재형식으로 집필하여 분야별 북한실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연구학회가 발행한 연구총서들은 북한 전문학자들이 기존 연구성과를 수정·보완한 것으로, 비교적 전문성은 높지만 기존연구들을 모은 것이라 총서로서의 체계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VII. 맺음말: 북한연구의 과제

남북분단에 따른 ‘시대의 아들’로 태어난 북한학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데올로기적 존재 구속성을 벗어나 객관적 학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나가고 있다. 북한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북한학과가 대학에 설치돼 있고, 북한학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개설된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이 있어 북한학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연구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북한자료의 개방 확대, 북한이탈주민의 증가, 북한연구에서의 다양한 방법론의 도입 등은 북한연구를 질적·양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토양을 만들어 주었다. 연구대상인 북한에 대한 현장접근은 아직도 어렵지만 북한의 공식 매체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북한관련 자료의 수집이 용이해짐으로써 북한연구 환경은 많이 좋아졌다.

최근 북한연구는 다양한 연구소재를 가지고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 북한연구의 백화제방(百花齊放) 시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북한연구는 전체주의 접근법, 비교정치 방법론, 내재적 접근과 비교사회주의방법 등 기존에 사용했던 다양한 연구방법과 함께 일상생활연구방법, 도시사연구방법, 문화인류학적 접근 등을 통한 북한주민들의 실생활과 관련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북한연구에서는 어느 특정 방법론이 주도적인 연구방법론으로 부각하지 않고 다양한 시각과 방법이 북한문제 연구에 적용되고 있다.

최근 제4세대 북한연구자들은 다양한 전공분야의 개념, 이론, 연구성과 등을 북한연구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적용하는 개방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 두드러진 북한연구 방법론은 일상생활연구방법이다. 북한자료 획득이 쉬워지고, 북한이탈주민들이 늘어나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연구가 용이해졌다. 북한에 대한 일상생활과 일상사 연구가 절실한 이유는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속살을 들여다보고 주민들의 내면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학에서 북한 일상생활세계에 대한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역사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등 다양한 학문 분과에서 이룩한 연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북한학이 객관적 학문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첫째, 이데올로기적 편견과 희망적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두 차례 반복한 ‘북한붕괴론’과 관련한 논쟁, 남북화해가 진전되던 2000년대의 ‘북한 변화론’과 관련한 논쟁에서 확인한 것처럼 북한의 실상을 우리식 인식과 잣대로 바라볼 경우 객관적 분석과 예측이 어렵다. 서동만이 1990년대 북한연구를 평가하면서 지적한 것처럼 “남한의 북한연구는 남한의 북한인식에 머무르지 않고 북한의 자기인식을 시야에 넣는 것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남한의 북한연구는 북한이란 현실에 의해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이다.⁴² 북한연구에서 중시돼야 할 자세는 이념적 관점과 인식론에 따라 선형적 가치판단을 하지 말고 사실에 근거한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전망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방법론에 충실한 북한연구에 천착해야 한다. 냉전시대 대부분의 북한연구

⁴² 서동만, “북한연구에 대한 반성과 과제: 90년대 연구성과와 문제점,” 『북조선 연구 서동만 저작집』 (파주: 창비, 2010), p. 121.

가 북한의 실상을 소개하거나 비판하는 서술과 해석 위주였다. 그리고 정세분석과 홍보차원의 연구가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지금도 상당부분의 북한연구는 정세분석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벌인 여러 사건들(핵실험, 천안함-연평도 사태, 권력승계, 헌법 개정 등)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시사해설 수준의 서술로는 북한학을 객관화·과학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양한 학문에서 사용하는 방법론과 이론을 도입하여 북한학의 객관화·과학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 기초연구와 역사연구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북한연구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기 위해서는 항일무장투쟁, 정권수립과정, 종파투쟁과 유일체제 구축, 주체사상의 체계화 과정과 권력승계 과정 등과 관련한 연구를 긴 호흡으로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학제 간 또는 다학문적 접근(interdisciplinary or multidisciplinary approaches)을 적극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대변화에 따라 북한연구의 영역이 정치학 위주에서 경제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속성과 체제위기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학문분야의 연구자들이 학제 간 연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접수: 4월 28일 ■ 심사: 5월 13일 ■ 채택: 6월 15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년지』. 1977.
- 고유환·홍민 외. 『사회주의 도시와 북한: 도시사연구방법』. 서울: 한올아카데미, 2013.
- 고유환·박희진 외. 『함흥과 평성: 공간·일상·정치 도시사』. 서울: 한올아카데미, 2014.
- 권현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 되는가』. 파주: 창비, 2013.
- 김성철 외.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996.
- 박순성·홍민 엮음. 『외침과 속삭임: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서울: 한올아카데미, 2010.
- 북한연구학회 엮음. 『분단반세기 북한 연구사』. 서울: 한올아카데미, 1999.
- 브루노 라투르 외 지음. 홍성욱 엮음. 『인간·사물·동맹: 행위(行爲)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서울: 이음, 2010.
-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서울: 나남출판, 1995.
- 송두율. 『역사는 끝났는가』. 서울: 당대, 1995.
- 안병영. 『현대공산주의연구』. 서울: 한길사, 1989.
- 조영주 편. 『북한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관점·방법론·연구방법』. 서울: 한올아카데미, 2015.
- 조정아. “구술자료를 활용한 북한도시 연구: 이론적 자원과 방법.” 조영주 편. 『북한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관점·방법론·연구방법』. 서울: 한올아카데미, 2015.
-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 『한국공산권연구백서』. 서울: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 1989.
- 홍민·박순성 엮음. 『북한의 권력과 일상생활: 지배와 저항 사이에서』. 파주: 한올아카데미, 2013.
- Highmore, Ben. *Everyday Life and Cultural Theory: An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2002.

2. 논문

- 강정인. “북한연구방법론: 내재적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동아연구』. 제26집, 1993.
- _____. “북한연구방법에 대한 새로운 제언.” 『역사비평』. 제26집, 1994.
- _____. “북한연구방법론: 재론.” 『현대북한연구』. 창간호, 1998.
- 고유환.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김정일정권의 진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2호, 1996.
- _____. “북한연구 방법론의 현황과 과제.” 『통일과 평화』. 창간호, 2009.
- _____. “북한연구에 있어 일상생활연구방법의 가능성과 과제.” 『북한학연구』. 제7권 1호, 2011.
- _____. “북한연구동향.” 『한국정치학회60년사』. 서울: 한국정치학회, 2013.
- _____.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위협인식과 대응에 관한 행위자-네트워크.”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2호, 2013.
- 김기봉. “북한에 대한 일상사연구의 가능성과 의미.” 박순성·홍민 엮음. 『외침과 속삭임:

-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서울: 한올아카데미, 2010.
- 김영수. “북한연구 동향 평가: 성과와 과제.” 『동아연구』. 제50집, 2006.
- 류경아·김용호. “북한 체제변화 연구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의 모색.”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1호, 2012.
- 박순성. “천안함 사건의 행위자-네트워크와 분단체제의 불안정성.”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1호, 2013.
- 박춘대. “북한 ‘핵무력’의 동학과 네트워크.” 송실대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 서동만. “북한연구에 대한 반성과 과제: 90년대 연구성과와 문제점.” 『북조선 연구 서동만 저작집』. 파주: 창비, 2010.
- 손호철. “한국정치 연구 50년.” 『한국정치학회50년사, 1953~2003』. 서울: 한국정치학회, 2003.
- 송두율.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와 사상』. 12월, 1988.
- . “북한: 내재적 접근법을 통한 전망.” 『역사비평』. 통권 54호, 2001.
- 안득기·허정필. “북한연구동향에 관한 소고: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1970년~2012년.” 『평화학연구』. 제14권 5호, 2013.
- 안병영. “북한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정경연구』. 8월호, 1975.
- . “통일 및 북한연구의 방법론 평가.” 『통일정책』. 제3권 1호, 1977.
- 이국영. “독일 내재적 접근의 한국적 수용과 오해: 북한연구에 대한 함의.” 『통일문제연구』. 제20권 2호, 2008.
- 이상근. “북한붕괴론의 어제와 오늘: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북한붕괴론에 대한 평가.” 『통일연구』. 제12집 제2호, 2008.
- 이상우. “북한연구.” 『공산권연구현황』. 서울: 법문사, 1981.
- 이현경. “북한연구 현황과 접근방향.” 『평화학연구』. 제11권 4호, 2010.
- 이희영. “탈분단과 국제이주의 행위자 네트워크: ‘여행하는’ 탈북 난민들의 삶과 인권에 대한 사례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1호, 2013.
- 최봉대. “북한의 도시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16권 1호, 2013.
- 홍 민. “분단의 사회-기술적 네트워크와 수행적 분단.”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1호, 2013.
- . “행위자-네트워크이론과 북한연구: 방법론적 성찰과 가능성.” 『현대북한연구』. 제16권 1호, 2013.
- Kim, Yongsoo, Eunkook Lee, and Haekyung Song. “A Sketch of North Korean Studies in South Korea: The Current Status and the Prescriptions to Establish Its Identity as an Independent Discipline.”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45, No. 3, 2011.

Abstract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North Korean Studies after the Divis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n 1945

Yu-Hwan Koh

This article aims to review research issues and activities on North Korean Studies after the divis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n 1945. Nowadays North Korea Studies is introducing various research methodologies and analysis methods. North Korean Studies was diversified. We can not point out any particular research methodologies and theories. North Korean Studies has been expanded and intensified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In order to develop a North Korean Studies we should address the following challenges. First, North Korean studies must overcome ideological prejudices and hopeful thinking. Second, we should adopt various methodologies in the North Korean Studies. Third, we need to invest on basic research of North Korean Studies. Finally, we should try to introduce interdisciplinary or multidisciplinary research in North Korean Studies.

Key Words: North Korean Studies, Methodology of North Korean Studies, Research Trends of North Korean Studies, Everyday Life Approach.